



환경 元年을 진단한다.

차 철환 /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회장

복잡하기 그지없는 대도시의 아파트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한강에 길게 이어지는 겨울밤의 달빛을 보며 또 한번 한 해를 마감하려는 아쉬운 시점에 서서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한 환희와 절망감이 되살아 난다.

나라 밖에서는 우리와 같은 분단의 비애를 함께하여 왔던 동서독이 통일을 성취 함으로서 그 기쁨을 자축하는 모든 독일국민의 환희가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있을 것이며 국내에서는 북경아시안게임에서의 종합 2위 획득과 남북총리회담은 물론 수십년만의 대홍수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물적 고통 등등 90년대 첫발을 내딛는 올해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다사다난하였음을 회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것중의 하나는 작년 이맘때 쯤 환경과 보전에 관한 제1차 유럽회의에 참석하여 매년 7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므로서 지구촌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 모든 생물의 1/3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밝힌 바 있는 나카시마히로시 세계보건기구 의장의 개막 인사말을 잊을 수 없다.

19세기에 찰스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의 영향으로 인간은 어떤 동물에 의하여 진화된 형태로 발달되었다고 지금까지 믿어왔고 최근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인간의 창조설이 거론되기도 있지만 여하한 지구상에 나타난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자연환경의 혜택속에서 생명을 유지하여 왔고 최근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과거 그어느때보다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종 인간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 및 지하자원을 비롯한 모든 자연자원의 고갈 등등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사건들이 지구 도처에서 발생되었다. 그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0년 한해 동안에도 환경보전에 대한 명암이 엇갈려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은 물론 일반국민에 이르기 까지 안도와 경악이 교차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90년도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한해동안의 환경오염문제 및 환경보전대책을 재고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지난 1월4일 2실 4국 13담당관 21과로 환경청

에서 처로 승격한 환경처는 현정부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장관으로 하여금 환경행정을 맡게 함으로서 당시 초대 환경처장의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년간 환경행정을 담당해온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함으로써 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기틀이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환경보전을 통하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뒷받침 될수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환경행정부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환경인들 사이에서는 환경부로서의 승격을 희망하여 왔으므로 다소 미흡한것이긴 하지만 환경처의 발족으로서 환경보전에 국민과 정부의 의식이 높아진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처의 출범 1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환경업무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며 각 부처간의 협력 역시 기대 하였던 만큼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것 같다. 예를들어 지난 11월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발생된 안면도의 불행한 사태는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처와 사업자 측인 원자력연구소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과연 이번 핵처리장계획에 환경처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는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핵처리장과 같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법정부적 차원에서의 환경보전 대책을 촉구한다.

한편 금년에도 일반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수질오염의 증대로 인한 음용수중의 트리할로메탄(THM) 농도를 포함한 음용수의 적부 문제일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몇몇 연구기관에서 조사된 결과 음용수의 수질이 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은 먹는 물에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수와 약수의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손실과 부작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수원 수질이 더이상 악화되는것을 막기위한 비상조치로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54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정발표한바 있다. 이번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팔당과 대청호는 수도권및 중부권의 약 1천8백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상수공급원

이라는 사실을 감안 할 때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 진다. 특히 시행상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국고는 물론 그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수해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서라도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수도물을 관리하는 건설부, 환경처, 보건사회부 그리고 시·도가 일심으로 협력하여 맑은 물 되찾기에 주력하여야 하겠다.

한편 그동안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사건은 지난 10월30일 건설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 중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지정은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도시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설치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km²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었으며 그린벨트가 지정된 도시는 13개 도시였다. 그동안 약 20년간 그린벨트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여 왔다고 보며 정부차원에서의 강력한 개발제한을 하여 온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일부 몰지각한 지도층인사들에 의하여 그린벨트내 호화주택이 들어서거나 대형유흥음식집이 나타나는 등 그린벨트의 훼손문제가 자연보존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의 그린벨트규제완화 조치는 분명 환경오염을 더욱증가시킬 수 있는 충격적 발표였다.

그동안 기존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불이익문제가 항상 문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총 16개의 완화조치 항목 가운데 그린벨트내 지역주민의 생활및 생업에관련된 내용은 4개항에 불과 할 뿐 나머지 12개 항목은 정부 각 부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환경보전을 역행하는데 앞장서는 듯한 느낌을 국민이 갖을 수 밖에 없는 불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린벨트지역내 골프장중설 허가는 자연보전의 측면에서 또한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일반서민들의 그린벨트 훼손행위는 엄격히 다스리면서 아직까지는 사치성오락으

로 지적되고 있는 골프장의 그린벨트내 조성허가는 정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하며 차제에 전국 골프장에서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독성농약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그린벨트 완화를 위한 10월30일 건설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무조건 철회되어야 하며 자연과 환경을 위한 공동회의 국가 환경대책 25인 위원회의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린벨트내 개인소유의 토지는 그린벨트 설정일 전과 후를 구분 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상태를 파악하여 그동안 불이익에 대하여 소유주들에게 정부적 차원의 차등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린벨트내 주민들에게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린벨트를 국유화하는 문제를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보전이 곧 국가보호라는 가장 기본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정부가 스스로 앞장서서는 않될줄 안다.

끝으로 지난 1년동안 환경보전을 위하여 높게 평가하고 싶은 몇가지 사례를 들고 그러한 일들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길 희망 한다.

먼저 일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안에서의 취사나 야영을 금한 조치는 환영하여 마지 않는다. 지난여름 강이나 산에 몰려든 피서객과 등산인파에 의하여 버려진 쓰레기 량은 상상을 초월한 다량이 버려졌고 그와같은 오염행위가 계속방치될 경우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은 비닐과 유리병 그리고 알루미늄캔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는 중병에 걸릴 위기에 직면 할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취사금지 이후 환경보전협화등 많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산을 찾는 등산객의 취사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든국민이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아래 조그만 일부터 환경보전에 힘써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 심어져야 하겠다.

한편 지난 11월20일 서울시는 서울의 환경보전현황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환경문제전문가를 비롯한 정부대표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대기와 수질오염문제 및 쓰레기와 녹지문제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여 환경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기업과 시

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바 있다. 특히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의 환경오염실태와 관련시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 "서울환경현황"을 발간하여 그동안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인 통계를 바로잡아 나가자고 한것은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높게 평가 한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정확한 환경오염의 자료를 공표하는 것을 두려워 하였으며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자료가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림으로서 국민 스스로가 각각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더많은 민간단체들이 환경보전 운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환경보전사업을 전적으로 정부에만 의존하여서는 쾌적한 환경의 유지를 되찾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 하여 정부는 민간단체의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백화점과 슈퍼마켓등의 유통업체에서의 자원재활용의 측면에서 수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상품포장의 색깔을 구분한다든가 목욕과 세탁업체에서의 샴푸와 합성세제사용의 억제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환경보전과 관련된 TV홍보를 자주 접할 수 있다는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기업도 관련분야에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스스로 실천하는 동시에 국민계몽에 앞장서야 할것이다.

현재 인류생존및 번영에 치명적인 위협을 던져주고 있는 환경문제는 이산화탄소, 메탄, CFC등 온실효과와 관련된 지구온난화 문제와 각종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산성비, 그리고 CFC사용에 따른 오존층의 파괴문제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범지구적 환경문제로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여야만 한다.

앞으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일반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시대적사명감을 갖고 실천함으로써 밝은 2천년대를 맞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기원한다. *